

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

(부승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54
----------	------

발의연월일 : 2024. 9. 10.

발 의 자 : 부승찬 · 추미애 · 김병주
황 희 · 허 영 · 안규백
김민석 · 윤후덕 · 정성호
전현희 · 박선원 · 박용갑
장경태 · 김준혁 · 한정애
이성운 의원(16인)

제안이유

군은 정보·수사 기관으로 국방부장관 소속의 국군방첩사령부를 설치하고 있으며, 국군방첩사령부는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등 다른 정보·수사기관의 경우 그 설치 근거를 법률에 두고 있음에 반하여 국군방첩사령부는 대통령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어 국가 공권력 집행기관의 설치 근거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그간 군의 정보 수집·처리와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성 위배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의 방첩 및 군사보안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

고 이를 수행하는 조직인 국군방첩사령부의 운영원칙, 직무, 권한 범위 등을 명확히 규율함으로써 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대한 적법한 직무 집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군 방첩, 군사보안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방첩사령부를 설치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국군방첩사령부 소속의 군인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 준수, 수집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 수집,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의 의무를 부여함(안 제3조).
- 다. 국군방첩사령부에 사령관 1명, 참모장 1명 및 감찰실장 1명을 두고,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 부대 및 기관을 두도록 하며, 정치 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
- 라. 국가가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 등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안 제12조).
- 마.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 등의 정당이나 정치단체 가입 등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4조).
- 바.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 등의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체포·감금,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 위치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등을 금지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정치 관여죄, 직권 남용죄, 불법감청의 죄를 범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및 각급 부대의 지휘관은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실을 인지할 경우 군인권보호관 또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1조).

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군 방첩, 군사보안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의 집행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1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사령부는 국방부장관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제3조(운영 원칙) ① 사령부는 운영에 있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과 그 밖의 직원(이하 “군인 등”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정보의 수집 목적에 적합하게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민간인과 군인·군무원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 기관 출입 등의 모든 행위
2. 군인과 군무원에 대하여 직무 수행을 이유로 권한을 오용·남용하는 모든 행위
3. 수집된 정보를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4. 군인·군무원,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및 신상에

관한 사항을 수집하는 행위

5. 이 법에서 정한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하는 행위

6. 이 법에 따른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 해석·적용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모든 행위

제4조(직무)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방첩 업무

가. 「군형법」에 따른 군 관련 방첩업무

나.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군을 대상으로 한 외국·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다.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과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라. 군 방첩대책 및 군 관련 방첩대책의 수립·개선 지원

2.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보안 업무

가. 다른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신원조사

나. 다른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사보안대상의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

다. 군 보안대책 및 군 관련 보안대책의 수립·개선 지원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군무원, 시설, 문서 및 정보통신 등에 대한 보안 업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가. 국내외의 군사 및 방위산업에 관한 정보

나. 대(對)국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정보

다. 「군형법」, 「군사기밀 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라.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정보

1) 「정부조직법」 제33조에 따른 국방부·방위사업청·병무청

2)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각군·합동참모본부·합동부대·기관

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방위산업체·전문연구기관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의 조정·감독을 받는 기관 및 단체

4. 「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5.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원 업무

가. 사이버 방호태세 및 정보전(情報戰) 지원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중 국방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지원

다. 방위사업청에 대한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업무 지원

라.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지원

마. 대테러·대간첩 작전 지원

② 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업무 지원의 범위 및 절차와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지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직무 수행 시 거부)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상관 또는 사령부 소속의 다른 군인등으로부터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제출 요청) 사령관(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소속 부대장을 포함한다)은 제4조의 직무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같은 조 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직) ① 사령부에 사령관 1명, 참모장 1명 및 감찰실장 1명을 둔다.

② 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을 둔다.

1. 국방부 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국군방첩부대
2.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본부의 국군방첩부대
3.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의 국군방첩부대. 다만, 지방 행정조직 단위로 별도의 국군방첩부대를 둘 수 없다.

4. 정보보호부대

5. 국군방첩학교

6. 방위사업청의 국군방첩부대

7. 국방보안연구소

③ 제2항에 따른 참모부서, 소속 부대 및 기관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과 사령관은 제4조의 다른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정치 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사령관 및 참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②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감찰실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감사원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사령관·참모장 및 감찰실장은 다른 직(職)을 겸할 수 없다.

제9조(사령관 등의 임무) ① 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 및 기관을 지휘·감독한다.

②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 업무를 조정·통제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

행한다.

③ 감찰실장은 사령부 소속 군인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감사·검열 및 직무감찰
2.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3. 민원 및 진정사건의 처리

④ 사령부 소속 부대장 및 기관장은 사령관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무기 휴대 및 사용) ① 사령관은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에게 직무 수행을 할 때 필요한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의 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의 무기 사용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12조(손실보상) ① 국가는 사령부 소속 군인등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사람이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사람이 사령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

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 제7조에 따른 사령부 소속 부대 및 기관은 위장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정치 관여 금지) ① 군인등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

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 특정 정치단체를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기업의 자금,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지원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특정 정당·정치단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집회를 주최·참석·지원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주·유도·권유·회유 또는 협박하는 행위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7. 사령부 소속 군인등이나 다른 군인·군무원 및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③ 사령부 소속 군인등은 다른 군인등으로부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사령부 소속 군인등이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 및 제1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령부 소속 군인등이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사령관은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제5항의 신고자에게는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직권 남용의 금지) 사령부 소속 군인등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불법 감청 및 불법위치추적 등의 금지) 사령부 소속 군인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등에서 정한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거나 위치정보 또는 통신사실확인 자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정치 관여죄) ①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8조(직권남용죄) ① 제15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9조(불법감청·위치추적 등의 죄) ① 제16조를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청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6조를 위반하여 위치정보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집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17조와 제19조제2항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군사법원법」 제291조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제21조(인권지도 및 감독) 사령관 및 각급 부대의 지휘관은 사령부 소속 군인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고 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인사법」 제59조의2에 따른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